

	보 도 자 료	바른사회시민회의 www.cubs.or.kr 02-741-7660
살기 좋은 나라는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성명서발표, 프레스센터 대화홀(19F), 14:00~16:00

좌파 독재 文 대통령, 국민의 심판 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온갖 의혹덩어리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曹國)을 선택함으로써 또 다른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버렸다. 결국 국민과의 전면 대결을 선택했고, 법치를 파괴하여 또 다시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누구보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희대의 좌파기득권이자 각종 범죄혐의에 둘러싸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조국은 법무부 장관직을 당장 사임하라. 조국은 본인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개혁과 법무행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 조국이 할 일은 당장 장관직을 사임하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부터 돌보는 일이다.

셋째, 검찰은 명운을 걸고 조국을 둘러싼 각 종 의혹을 엄정수사하라. 검찰은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었다고 하여 대통령과 여권의 압력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수사해야 하며 그것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넷째, 국민들께 호소한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민주주의, 삼권분립과 법치를 훼손하고 고의적인 안보, 경제 파괴로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는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이 피로써 지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자유한국당에 고한다. 한국당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문재인 좌파독재를 제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앞장서라. 조국 해임건의안과 특검발의에 즉시 착수하라.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세력을 저지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당파적 이익에 함몰되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여섯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경고한다. 여당과 정의당은 범죄혐의자 조국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 합법적으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검찰을 겁박했다. 이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야합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일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

2019. 9. 10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자유민주연구원/ 마인드 300/
한국자유회의/ 프리덤코리아포럼